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신성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5
----------	-----

발의연월일 : 2025. 2. 3.

발 의 자 : 신성열, 김영배, 김지숙,
나유경, 박노일, 유환규,
정경옥 의원(7명)

1. 제안이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지정·지원 등(안 제5조)
- 라. 시행계획의 수립·심의(안 제6조)
- 마. 준용규정(안 제7조)
- 바.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춘천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춘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장의 책무) 이 조례로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아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야간·휴일 어린이병원 및 전담 병동 운영
2.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
3.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휴일 약국 운영
4.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심의)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시장은 보조금을 받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공헌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 관리,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수립 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